

원유 생산량 회복 '정신호'

원유 생산량이 FMD 이전의 95%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에 따르면 9월 중 원유 생산량은 15만7천649톤이었으며 일평균 5천225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95% 수준이었다.

더욱이 지난 8월 기본원유가 인상 이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 8월 중 일평균 원유 생산량이 5천16톤에 불과했지만 9월에는 5천255톤으로 4.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MD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거나 없었던 충남북과 전남북 지역의 원유 생산량은 FMD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북과 전남북의 원유 생산량은 각각 941톤, 296톤, 376톤, 393톤으로 지난해 9월 생산량과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났다. 그러나 FMD피해가 가장 컸던 경기와 강원도는 지난해 9월의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원유생산량은 2천155톤으로 전년 동월 2천388톤에 비해 90% 수준이며 강원도는 213톤으로 91%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본원유가 130원 인상과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 상향 조정에 따라 원유 수취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9월 중 평균 원유 수취가는 972.98원으로 기본원유가 인상 이전인 7월 829.16원에 비해 143.82원이 높아졌다.

원유가격 연동제 정부 중재안 수용

원유가격 연동제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당해연도 통계청 생산비와 직전년도 통계청 생산비의 차액에 직전년도 원유기본가격의 합을 원유기본가격으로 하는 중재안을 생산자와 수요자 양측 모두 수용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3차 낙농제도개선 T/F에서 생산자 측과 수요자측은 정부 중재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수요자측은 정부의 기본입장에 동의하는 한편 단서조항으로 2013년부터 적용,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기본가격 확정 2달 후 적용 할 것을 요구했다.

수요자는 2011년의 경우 추정생산비를 통해 2012년의 유대 인상분까지 이미 적용된 것으로 판단해 2013년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반영에 따른 준비기간이 2달 가량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산자측은 2012년부터 시행한다는 조건 하에 지속적으로 생산자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통계청 산출방법의 개선이 선행된다면 정부중재안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시행하되, 첫해(2013년)에는 2012년 생산비에서 2011년 생산비와 2010년 생산비 평균을 차감한 금액을 현행 가격(834원)에 합산해 결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2014년부터는 전년도 생산비에서 전전년도 생산비를 차감한 금액을 전년도 가격에 합산하여 결정한다.

유일제·생산자, 통계청 생산비 두고 '절예'

원유값 연동제의 기준이 되는 통계청 생산비를 두고 유업체와 생산자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서울 양재동 소재 낙농진흥회에서 열린 제3차 낙농제도개선 TF 회의에 참석한 생산자와 수요자 대표들은 정부가 제시한 원유값 연동제 기본안의 방식에는 합의했으나 기준이 되는 통계청 생산비에 대해서는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제시한 원유값 연동제안은 직전년도 원유기본 가격에 당해연도 통계청 생산비에서 직전년도 통계청 생산비를 뺀 차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생산비 변동에 따라 연동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수요자 측은 기본적으로 통계청 생산비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동제에 따라 원유가격이 결정된 후 제품가격과의 연동을 위해 두달 이후 원유값에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미 생산비 변동이 반영돼 원유값이 결정된 만큼 내년 자료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생산비 변동차액을 계산해 2013년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박상도 한국유가공협회 부장은 "통계청의 생산비가 기준이 돼야 물가당국과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안에 합의한다"며 "다만 이번에도 원유값을 올린 후 제품값을 바로 올리지 못하는 등 유업체

의 경영압박이 예상되는 바 원유값이 결정되면 두달 간의 완충기간을 두고 적용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 생산자측은 통계청 생산비 조사방법이 개선돼야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정식 한국낙농육우협회 부장은 "통계청 생산비대로 하면 2003년에서 2010년까지 생산비가 고작 30% 정도 오른 것으로 나오는데 현장 농가들은 이 생산비로는 목장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통계청 생산비와 현장의 괴리가 엄청난 상황에서 통계청 생산비가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사무관이 참석, 낙농생산비 조사 방안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 사무관은 "현재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낙농생산비 조사방안을 개선키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용연수, 산차, 자가노력비의 현실반영과 함께 비목 통일 등 여러 개선안을 논의 중에 있어 올해 안에는 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입계별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 자동배정

유제품 가격 안정에 기여한 유업체에 우선 유제품 무관세(할당관세) 물량이 배정된다.

정부는 내년에 무관세(할당관세)로 들어오는 유제품 물량을 유제품 가격안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수입업체별로 차등 배정토록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8일 국내 원유 생산량 전망, 소비자 물가안정 및 국내 낙농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물가당국과 내년도 할당관세 품목 및 추천 물량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우유가 우유가격을 올릴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이런 계획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가 10월 24일부터 우유 가격을 9.5% 올리는 등 유업체들이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강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 향후 우유값 인상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목된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FMD로 인한 피해, 유제품 판매실적, 수입실적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로 들어온 유제품을 배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원유생산량 감소에 따른 유제품 원료공급확대와 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치즈, 분유 등 11개 유제품원료 14만2천톤(원유 환산시 64만7천톤)을 무관세로 수입토록 했다. 그 결과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입원가가 높아졌어도 국내 유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았고, 일부 품목은 가격이 하락, 물가안정에 기여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올 겨울도 구제역 가능성" 축산농가 벌써 삼일음판

겨울철을 앞두고 또다시 구제역 비상령이 내려졌다. 구제역에 감염됐다가 자연 치유돼 구제역 비구조단백질 항체(NSP)가 형성된 소·돼지 등이 전국 153개 농가에서 1000마리 이상 발견돼 올 겨울 구제역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24일 오전 김항식 국무총리가 정부과천청사 내 농식품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농장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에서 NSP항체가 상당수 검출돼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NSP가 검출됐다는 것은 백신주사에 의해 항체가 형성된 SP와 달리 가축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자연치유돼 현재는 체내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농장 인근 토양과 공기 등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해 11월 28일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4월 20일 경북 영천의 돼지농장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그동안 12건의 의심가축 신고가 접수됐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현재까진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만에 이어 9월 말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인근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공항과 항만 등을 드나드는 해외여행객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대만과 중국 외에도 베트남의 경우 올해 구제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여행객 등을 통해 외국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올 겨울에도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보상금도 최대 80%까지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한·미FTA피해보전대책 '일'명이 없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한·미 FTA피해보전 대책이 알맹이가 없는 생색내기예 그쳐 농가에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미진한 한·미 FTA대책을 대폭 보완할 것을 집중 추궁했다.

김효석 의원(민주, 담양·곡성·구례)은 "FTA는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 분야가 생기는데 정부의 대책은 과거 대책을 재탕, 삼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질책하고 "정부가 확고한 피해보전 대책을 내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준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상규 의원(한나라, 남해·하동)도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 예산을 조금 따고 한·미 FTA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는 낙후돼 가는 농업을 위해 정부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역할 아니냐"고 따지고 "FTA로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손해를 보는 분야 산업을 메꿔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윤영 의원(한나라, 거제시)은 "한·미 FTA보전대책으로 한해 8,300억원씩 모두 22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는 데 농식품부 예산은 다른 부처 예산보다 적다는 게 잘 수궁이 안간다"고 지적하고 "FTA로 창출되는 국부 증가를 감안할 때 농업계를 위해 한시적으로 목적세라도 신설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생산자 단체들의 항의 상명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7일 '한우가격 폭락, 한우산업 다죽어간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한·미 FTA대책인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FTA의 대표적인 피해분야인 한우산업분야의 안정화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통행식 국회비준을 강행한다면 17만 한우농가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우협회측은 한미 FTA대책으로 암소도태 장려금 지급, 사료전진기지화 시설 지원, 2톤 이상 스킵로더의 면세유 지원,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조정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와 관련 '국회의원 한·미 FTA 반대 확약서'를 취합,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전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상임위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제안한 13개 피해보전대책 중 감귤 지원 확대 요구는 일부 수용하고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간 영구화는 부분 수용해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하며,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간도 2014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방안도 부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수산조건직불제 도입과 조건불리직불제의 지방비분담 축소, 농어업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 수입 사료원료에 무관세 적용,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FTA이행기금 10조원 조성,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 및 지급 기한 연장, 면세유 대상 확대, 시설현대화 지원확대 및 금리 인하, 22조 1000억원 투융자 계획 확대 조정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보고 했다.

이어 쌀 직불제 도입이나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기준 완화, 폐업지원제도 개선 등은 중장기 적으로 검토하거나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부의장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 미국 국민 방문 결과를 설명한 오찬 자리에서 한·미 FTA로 피해보는 산업에 대한 보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